

# 석유 정책 방향



이희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전통있는** 석유협회 가을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다른 것도 아닌 유가연동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마는, 개괄적인 내용이 적혀있고, 평소에 제가 연동제에 관해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 1월에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IEA에서 1년동안 한국의 에너지상황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가지 정책건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석유정책 분야에 대한 IEA의 권고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앞으로 한국시장에서 업그레이딩 시설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러한 시설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첫번째 권고내용이었고, 두번째 것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투자규제를 자율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투자자율화 권고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석유수요를 억제하는 정부차원의 석유수요 억제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 했고, 네번째로 가격자율화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네가지의 권고사항을 좀더 살펴보면 근원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바로 가격규제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규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업그레이딩에 대한 투자도 잘 이루어질 수 없겠고 또 가격이 불합리한 상황에 있는데 투자자율화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유수요절감 대책도 가격이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그것 역시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IEA의 권고사항이 네가지이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 가격제도의 합리화, 보다 구체적으로 가격규제의 철폐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IEA는 선진국의 그룹인 OECD의 회원국이 결성한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95, 96년도에 OECD에 가입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부는 IEA의 가입의사를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EA에 가입이 되면 하나의 클럽멤버로서 IEA 회원국에 대해서 권고하는 여러가지 정책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려를 해야 하는 무게있는 권고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때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유가연동제라는 것은 우리의 석유가격 제도라는 틀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오는 의미있는 정책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유가격규제는 두가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가격에 대한 실링을 설정하는 제품가격 상한 규제이고, 두번째는 그와 동시에 개별 정유회사의 이윤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제품가격의 실링을 설정하는 것과 플러스 이윤규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이 연동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제품가격설정에 있어서 가격조정의 시점을 정기화한다는 것이 현재 제도와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기화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부정기적으로 가격조정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매달 한번씩 정기화하여 원가의 변동요인을 그때그때 가격에 반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10년동안의 가격조정의 인터벌이 얼마였는가를 보면, 대략 1.7년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가격조정의 시점을 1개월로 단축해서 정기화, 정례화한다는 것이 현재의 제도와 달라진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윤규제에 있어서도 이윤조정의 시점을 과거의 평균 1.7년에서 1년으로 정기화, 정례화한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조정의 시점을 정기화한다는 것이 지금 제도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의 가격규제는 계속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월 변동됨으로 해서 가격규제는 있지만 가격경쟁이 있는 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석유가격은 쉽게 변동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자율화가 실제로 시행이 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과연 그렇게 변동하는 가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상당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변동하는 가격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서 연동제의 도입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생산자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연동제가 있으므로 해서 가격조정 시점이 정기화되어서 생산자의 캐시플로우에는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도와 비교해 볼때 생산자와 소비자, 또 가격조정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윈윈시추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터, 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취지가 가격자율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의 준비조치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자율화에 이르는 준비단계로서 연동제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점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제는 준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그것 하나 가지고서는 앞으로 있을 가격자율화를 준비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윤규제가 계속 존속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윤규제라는 것은 규정에 의한 이윤규제로서 궁극적으로 정유사의 개별적인 손익정산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개별손익을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해왔는데, 시장이 하는 기능이 바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손익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그런 결과를 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라는 제3의 공적규제기관이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유가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해 온 실적을 떠나서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애로를 저

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이윤규제지도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정유회사의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이윤규제를 덮어놓고 어떤 산업이나 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되겠다는 정책방향이 있었다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산업에 있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이윤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활성화가 불가능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규모의 경제 때문에 독점적인 구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가 규제로서 가격에 대한 실링을 정해 가지고 기업이 나중에 회수해 가는 이윤에 대한 예상 상한치를 설정하는 가격의 실링제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실링 제도는 전통적으로 보면, 전력공급자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독점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까지 전력독점공급 체계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있는 여건에서 불가피한 체계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가격실링을 정부가 함으로써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산업에 있어서는 이윤에 대한 규제가 사후적으로 조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전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메카니즘을 잠깐 살펴보면 사전적으로 소위 적정 이윤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집어넣어서 소비자가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실제 이윤이 적정 이윤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너무 과도한 이윤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전력투자가 계속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투자채원으로서는 그만큼 이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투자확대가 없는 지역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초과이윤의 상태가 대부분의 경우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꾸어준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과도한 이윤을 보고서 노조가 보수체계의 대폭적인

상승을 요구해서 다음 해에 그것을 회수한다거나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여러가지 혜택을 올려가지고 다음 회계년도에 가서는 눈에 보이는 과도한 이윤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적정 이윤보다도 실제이윤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규제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을 잘 해서 얻어진 결과니까 경영진이 가져가라 하는 것으로 아예 손을 떼어 버립니다. 반면에 나중에 적정이윤보다 실제이윤이 떨어질 경우에는 경영진이 일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해당 전력회사의 주식이 폭락을 하는 사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이윤과 또 사전에 레귤러토리바디가 산정한 적정이윤과의 차이는 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다시 재평가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정산제도 처럼 정부가 이것이 많다 적다 해서 정산하여 돌려받는 그러한 사후정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실링을 주고 그 다음에 이윤에 대한 사후정산을 한다는 것은 이중의 안전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유회사가 과도한 이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억제 장치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러한 사후 규제제도가 정유회사의 과도한 이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유회사의 그 동안의 여러가지 리포트를 본다면 다른 어떤 나라의 정유회사에 비해 봐서도 그 결과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앞으로도 과연 우리가 국제화하고 자율화한다면 달라진 여건에서 그러한 기조가 과연 옳은 것이냐, 정유회사의 과도 이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정유회사의 과도한 이윤 또는 적은 이윤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사항은 휘발유값이 얼마나 싸냐, 석유값이 얼마나 싸냐 하는데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이겠습니까. 그러한 값이 싸냐 비싸냐의 결정은 그것이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고, 그렇게 경쟁에서 결정된 가격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A정유회사의 지나간 연도의

순이익이 100억원이었고 B정유회사는 1억원이었다고 했을 때 100억원과 1억원의 의미라는 것은 경영효율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예상되는 여러가지 경제여건에서 100억원을 만드는 A회사의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생각을 앞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유가연동제에 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내려가는 가격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석유가격의 예를 본다면 올라갈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를 소비자들은 아주 당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다면 가격이 상향조정되었을 때 대개 어떠한 경우였느냐 하면 OPEC에서 가격인상을 어나운스해가지고 그것이 소비자들한테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지가 되었을 경우, 아니면 환율 변동이 급격하여 그것이 같이 접목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한가지 놀라운 것은 내년부터 정부가 특소세를 인상해서 소비자가격이 올라갑니다. 그점에 관해서 소비자 여론이 상당히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우리가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니가 가격을 올려서 에너지를 줄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가격인상에 관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한번 던져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소세를 올려서 가격을 올리는데서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하는데 쓰겠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확대하는데 쓰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 판단으로는 소비자들이 제 나름대로 각각 교통체증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마련하는구나,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내가 주말에 드라이브할 때나 아침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의 짜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구나 해서 어떤 베네핏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소세 인상 방안은 여론 측면에서 볼때 예상외로 그것이 지금 집행단계에 들

어가도 소비자들의 반응 측면에서 볼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특히 석유가격이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때 환율이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면 상당히 환율상승폭이 커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변동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는 의구심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수입품이 많은데 다른 수입품가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왜 석유값만 상승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고, 두번째는 원유의 복합 단가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대폭적인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는한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왜 썩 원유값도 있을 텐데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런 것에 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유가연동제가 실시 되면 5개 정유회사 제품이 다 같이 동시에 한꺼번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이 보일 것입니다. 소비자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경쟁에 의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마치 담합에 의해서 움직인 듯한 인식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울한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소비자들의 반응 이라는 것은 사실 점치기 힘들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예상해 볼때 자율화에 이르는 전단계 조치로서 유가연동제만 의지 했다가는 유가자유화는 상당한 애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공급자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품중의 제품가를 연동함으로써 제품가를 구성하는 상당부분의 원가가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가는 원유가와 환율이 되겠는데 제품 상당부분의 원가가 변동된다는 사실 원가의 변동이 가격 변동으로 보장이 된다. 가격 전가로 보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비용 최소화 노력의 줄지 않겠느냐, 물론 이자리에 계신 업계에 종사 하시는 분께서는 기준가보다도 싸게 들어올 수 있는 노력은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

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가보다 싸게 들어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격 보다도 싸게 들어온다는 소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이런 가격 전가를 보장하는 제도에서는 아무래도 미약하지 않겠느냐 하는 공급자 반응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율화의 전단계 조치로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게을리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볼때 몇가지 준비 단계가 저는 연동제를 유가자율화의 전단계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연동제를 하려는 목적은 유가자율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완벽하게 유가자율화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항을 한번 동시에 고려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섯가지 정도가 연동제를 실시 하면서 동시에 고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현재 이윤의 사후규제 제도가 존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제에 이윤사후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유가자율화에 이르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윤의 사후규제제도를 철폐하면서 동시에 유가연동제 실시시점에서의 기준원가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원가산정시에 적정이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원가를 산정할 때 적정이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엄밀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동시키면서 동시에 이윤에 대한 사후규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는 유가연동제에 의한 가격은 유가연동제를 실시 하되 그 각각의 경영의 철학과 전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이점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정유회사로 하여금 유가연동제에 동참하든가 아니면 혼자 개별로 나가든가 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연동제에 동참하는 정유회사는 연동제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정유회사는 하나의 프리랜서로서 가격 해당기업

의 전략과 장단기 목표에 의해 가격전략을 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유회사의 다양성과 개별경영철학을 우리 정유산업에 또 정유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렇게 가격자율화가 앞으로 연동제를 실시한 다음에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느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가격자율화가 실시될수록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보확충의 노력은 더욱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의 안을 보면 연동제로 들어가고 가격자율화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위기 발생시에는 정부의 가격통제가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통제가 필요할 때 즉각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유산업의 동향과 그다음에 해당기업의 산업멤버들의 운영동태 같은 것이 면밀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1년반 또는 2년 터울로 전부 가격을 조정할 때 쓰는 가격조정의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에 비추어 본다면 일종의 스냅사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2년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는가 하는 것은 한시점에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윤이 많다, 적다 판정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가격이 자율화되면 정부가 우리나라 정유산업의 동태에 관해서 비디오테이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때 사업이 안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이러한 경영결과가 나왔는지 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상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바로 지금 그러한 정유산업이 정부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소상한 데이터리포트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유산업이 정부에 하는 여러가지 데이터리포트는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연속성이나 데이터의 포괄성 같은 것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또 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유시장통제 또 석유소비통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없는 것이 석유의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석유통제입니다. 휘발유 한배럴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를 소

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있어야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도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있는 우리나라 에너지의 엔드유스컨센션은 저희 연구원에서 매 3년마다 정부용역을 하고 있는 에너지센서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샘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가 가격자율화를 시행하면서 최소한도 석유부문에 있어서라도 엔드유스컨센서스에 대한 정기적인 데이터의 컬렉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부가 일종의 정유산업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단시간에 가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관리조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빨리 손을 떼고 다시 시장이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가격자율화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유통부문에서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유통계약은 장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확보를 위한 과도한 비용지불이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일종의 거래비용인데 그런 것을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 가지고 그런 비용이야말로 세이브되어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논의를 했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율화에 이르는 전단계 조치로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가격이 매월 출렁거리게 되면 가격변동의 위험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선물시장을 만들어서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없는 이것을 차제에 정유회사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앞으로 연동제가 실시되면 석유제품 선물시장을 개설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보다 시장경제가 뒤떨어져 있는 중국도 선물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석유제품에 관한 선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선물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가를 자율화시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가 와서 안되겠다, 그러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검증해 보니까 유가를 잡아가지고 인플레이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단견이었고, 단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유가를 억제해서 인플레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는 매크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를 억제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데이터를 검증해 보니까 유가억제에 의해서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낮아 에너지소비를 낭비적으로 결과를 가져와서 단위당 코스트가 올라가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가는 정부가 신경써야 될 유가결정의 부분은 유가도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그것에 기여하며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정부정책이 초점이 주어져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정유회사의 이윤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만큼 많은 이윤을 정유회사한테 허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는데 앞으로는 그것 보다는 이러한 유가수준이 우리나라의 생산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 과연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부가 보다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은 에너지 정책이 바로 국가의 장기발전과 전략을 돕는 장기발전 전략의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 에너지 절약은 우리 손으로 부터